

중국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양안관계

文興鎬

- | | |
|------------------------------------|--------------------------------|
| I. 서론 | A. 18대 정치보고, 지도부 교체와 대만정책 변화 |
| II. 후진타오 집권기의 양안관계 변화 | B. 마잉주의 친대륙노선과 대만의 '통독' 논의의 향배 |
| A. 민진당 정부의 정명독립운동과 양안의 갈등 | C. 미국의 대 중국, 대만정책의 조화와 충돌 |
| B. 새로운 삼불정책과 양안의 현상유지 | IV. 결론 |
| C. ECFA 체결과 양안의 상생공영 | |
| III.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양안 관계 전망 | |

한글초록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 등장은 단순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에 많은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양안관계는 그러한 변화의 핵심적 부분이다. 개혁개방 이후 양안관계는 교류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대만의 지도부 교체에 따라 큰 변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대만에 비해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만정책 변화의 진폭이 작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역대 최고지도자의 대륙관과 대륙정책이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집권기의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임 지도자들과 다르다. 그들은 양안의 분야별 교류협력이 부단히 확대되는 시기에 활동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안관계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시진핑은 1985년 이후 대만과 인접한 푸젠 지역에서만 17년여를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양안관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제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의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02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하기까지의 양안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시진핑 집권 이후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변수인 시진핑의 대만정책 변화 가능성, 마잉주의 친대륙 노선과 대만의 통일·독립 논의의 향배, 중·미관계와 제2기 오바마 정부의 대만정책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중국, 권력교체, 시진핑, 양안관계, 평화, 공영

I. 서론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8大로 약칭)를 통해 등장한 제5세대 지도부는 중국의 새로운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당면 과제를 고려할 때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은 단순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중국 최고 지도부의 교체에 따른 분야별 파급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권력 교체가 야기할 변화 중에서도 양안관계는 매우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양안관계는 교류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특히 2000년 등장한 천수이벤(陳水扁) 민진당 정부가 대만의 정명(正明) 운동을 전개하고 자주 독립적 지위 회복을 도모하면서 양안관계는 첨예한 대립을 경험했다. 그러나 2008년 마잉주(馬英九) 국민당정부의 재집권은 양안관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마잉주는 2008년 3월 총통 선거 과정에서 민진당 정부의 반대륙적 정책을 지양하고 소위 ‘삼안’(安定·安心·安全)에 입각한 양안의 평화정착, 경제협력을 통한 대만 경제의 재도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잉주의 친대륙적 정책은 양안관계를 크게 변모시켰으며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12년 1월 마 총통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처럼 그 동안의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내부 변화 특히 지도부의 교체에 따라 많은 변화 양상을 보여 왔다. 물론 중국의 경우는 대만에 비해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만정책 변화의 진폭이 작았지만 적어도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짜오즈양(趙紫陽),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가 인식하는 대만문제의 실상과 양안관계의 미래상은 차이를 보였다. 대만의 경우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 리덩후이(李登輝), 천수이벤, 마잉주의 대륙관과 대륙정책은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즉 체제·이념적 차이와 함께 양안 최고지도자의 상호 인식과 정책, 비전의 차이가 양안관계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 등장에 따른 양안관계

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1950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축인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임 자들과 차이를 보이며 그들 대부분은 대만을 무력에 의한 해방보다는 대화 협상에 의한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사회에 진출했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적인 경력상의 차이는 있지만 양안관계의 다양한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시진핑(習近平)은 1980년대 중반 이후 20여년을 대만과 인접한 푸젠(福建), 쑤저(浙江)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따라서 시진핑은 누구보다도 양안관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양안관계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주목하여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 출범에 따른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02년(16大)에서 2012년(18大)에 이르는 기간의 양안관계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18대 이후 양안관계 변화를 전망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주로 민진당 집권기의 갈등, 국민당 재집권 이후의 화해·협력, ‘경제 협력기본협정’(이하 ECFA로 표기) 체결 이후의 상생·공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18大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분석대상은 시진핑 집권기의 대만정책 변화 가능성, 마잉주의 친대륙노선과 대만의 통독논의 향배, 오바마 재선 이후의 중·미관계와 미국의 대만정책 등이다.

II. 후진타오 집권기의 양안관계 변화

2002년 후진타오가 최고 지도자로 등장했을 당시는 천수이볜 민진당 정부가 대만의 자주 독립을 주창하면서 양안관계가 냉각되었던 시점이다. 그러나 2008년 마잉주 국민당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평화·공영을 표방하며 관계발전을 가속화했으며 2010년의 ECFA로 상징되는 양안의 상생·공영은 양안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과거 10년간 양안관계의

다양한 변화 양상과 특징은 또 다른 10년의 항배를 전망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A. 민진당 정부의 정명·독립운동과 양안의 갈등

대만 출신(本省人)의 지방 정치인과 국민당 계엄통치에 저항했던 반체제 지식인¹⁾ 중심의 민진당 정부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양안관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천 총통의 정치적 성향이 대만독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덩후이 집권 후반 이미 가시화된 대만의 외교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양안관계에 긴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의 많은 대만인들은 천 총통을 자유·민주·인권의 상징으로 환호했고 중국, 중국인이 아닌 대만,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기대했으며 이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었다.²⁾ 왜냐하면 과거 국민당 집권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법통(法統), 통일 방식과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갈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진당 정부는 하나의 중국 즉 통일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만의 역사·문화적 실체를 재확인하는 ‘정명’(正名)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일환으로 국영기업의 중화·중국 명칭 삭제, 신헌법 제정 등을 추진했다. 중국은 민진당 정부의 소위 대만화(臺灣化) 작업에 강·온 양면전략으로 대응했다. 예를 들어 후 주석은 2004년 5월 17일 중공중앙 대만사무관공실과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공동 명의로 발표된 7개항의 성명³⁾을 통해 양안의 화해

1) 이들은 대만의 유일한 정당이던 국민당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당외’(黨外)로 통칭되었다. 민진당의 역사 및 정치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Shelley Rigger, *From Opposition to Power: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2001), pp. 15-35 참조.

2) 실제로 당시 대다수의 대만인들은 자신들이 엄연한 독립적(de facto independent) 정치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간 역학구도와 국제사회의 불합리한 원칙 때문에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천수이볜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행과 국민당 독재의 억압을 초래한 중국·중화의 허명에서 벗어나 대만·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3) 이는 당시 ‘胡七點’으로 지칭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1) 양안의 대화·담판·협상 재

협력 확대 조치를 제안하는 동시에 대만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四個決不’⁴⁾로 표현했다.

이처럼 민진당 정부 집권기에 지속된 대만의 정체성 강화 및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의 표출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으며 결국 중국은 ‘반분 열국가법’ 제정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양안 최고지도부의 이러한 공방의 상당부분은 국내정치 상황과 연계된 ‘정치행위’였으며 특히 2004년 힘겹게 재선에 성공한 천수이볜의 대 중국 공세는 대만에서조차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중국 역시 대만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갖는 한계를 인식했고 특히 양안의 교류협력 확대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민간차원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만과 중국으로 하여금 공세의 수위를 상호 조절하고 교류협력을 지속하도록 했다. 이는 민진당 집권기 ‘통독문제’를 둘러싼 양안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B. 새로운 삼불정책과 양안의 현상유지

2000년과 2004년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조직과 지도체제를 일신한 국민당의 2008년 재집권으로 양안관계는 또 다른 변화의 전기를 맞았다. 마잉주는 대선 과정에서 소모적인 ‘통독’ 논의의 종식과 양안의 평화공존을 역설했고 이는 결국 민진당에 실망한 대만인들의 지지로 이어졌다. 마잉주 정부의 대

개, 2) 적당한 방식의 양안간 연계 유지 및 협상을 통한 교류상의 각종 문제 해결, 3) 전면적 삼통 실현, 4) 대만의 산업구조 및 경제상황을 고려한 경제협력의 긴밀한 안배와 호리호혜(互利互惠) 강화, 5) 다양한 인적 교류의 강화, 6) 화해협력 분위기하에서 대만인들이 추구하는 평화, 사회 안정, 경제발전 실현, 7) 대만지구의 국제적 지위 및 그에 상응한 활동 공간 문제의 협상 등이다.

- 4) 이는 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있어 결코 동요하지 않는다, ②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③ 대만 인민의 염원을 관찰하는 방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④ 대만독립, 분열 활동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후 주석은 3월 13일 전국인대 인민해방군대표 전체회의에서 군이 ‘居安思危’ 정신으로 주권 수호, 영토 보존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만문제에 대한 ‘반분열국가법’의 중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人民日報』, 2005. 3. 14.

특정책은 양안의 통일을 반대하고(不統) 대만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不獨)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다(不武)는 소위 ‘신삼불’(新三不) 정책에 기반했으며 중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국민당 정부는 마 총통 취임 직후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양안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상생을 도모하지는 ‘92합의’(92共識), ‘일중각표’(一中各表)에 입각하여 국민당, 공산당의 ‘당 대 당’ 협의의 창구를 확대했다.⁵⁾ 동시에 반관반민 기구인 대만 해기회(海基會)와 중국 해협회(海協會)의 협상 기능을 복원하여 정부간 협의를 대행했다.⁶⁾

한편 마잉주 정부는 양안 경험의 확대 조치를 본격 추진했다. 우선 국민당이 절대 다수를 점했던 대만 입법원은 2009년 6월 12일 양안교류의 종합지침인 ‘양안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의 제38조와 제92조를 수정하여 화폐·금융 교류제한을 대폭 완화, 철폐하고 중국 인민폐의 대만 유입과 환전을 허용했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시행된 전세기의 양안 직항, 샤먼~진먼(金門)의 소삼통 확대 및 중국인 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경험 확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대륙내 대만기업의 투자규제 완화 및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중국자본의 대만진출 허용 등을 포함한 상호 투자·협작을 추진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국민당 정부는 양안의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는데 우선 마 총통은 현실성없는 유엔 가입 및 독립 추진보다는 실질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활로외교’(活路外交)에 역점을 두었

5) 1945년 충칭(重慶) 회담 이후 60년 만에 열린 댜판과 후진타오간의 ‘국공회담’에서는 양안의 ① 대등한 대화·협상 재개, ② 적대관계 청산과 군사적 신뢰 구축, ③ 전면적 경제협력 추진 ④ 대만의 국제적 활동 확대 촉진, ⑤ 당 대 당의 정기적 접촉 추진 등 5개항에 달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국민당이 집권당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력상의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도 이를 의식해 합의 내용을 ‘신문공보’(press communique) 형식으로 발표했다.

6) 예를 들어 해기회 이사장 장빙쿤(江丙坤)과 해협회 회장 천원린(陳雲林)의 ‘장천회담’(江陳會談)은 2008년 6월 중국 샤먼(廈門)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한 이래 같은 해 11월 타이베이에서의 2차 회담, 2009년 4월 난징(南京)에서의 3차 회담을 갖고 양안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문홍호, 중국과 대만의 협상제도와 운영 사례 연구, 『中國研究』,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역종합연구센터, 제43권(2010.3) 참고.

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소모적 외교전을 중단하고 실리에 중점을 둔 실용 외교 방향을 의미한다.

이처럼 민진당 정부와 확연히 구분되는 마잉주 정부의 대륙 지향적 실용 노선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우려한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특히 양안의 화해·협력을 통해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려는 소위 ‘마잉주노믹스’는 당시 대만의 대내외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선택으로 평가되었으며 중국도 이를 전폭 지지했다.⁷⁾

C. ECFA 체결과 양안의 상생공영

지난 10년의 양안관계 변화 과정에서 주목할 또 다른 사건은 마잉주가 공약한 바 있는 ‘하나의 중국시장’(一市場)의 일환으로 양안이 ‘ECFA’를 체결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마잉주는 양안의 상생공영 수준을 크게 제고하는 동시에 2012년 1월 자신의 재선 기반을 굳혔다. 당시 대선 과정에서는 마잉주 정부가 추진해 온 대륙정책의 실효성, 성과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확산되었다.

우선 ‘92 합의’의 실효성과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 문제가 최대 쟁점이 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양안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중국과의 ‘원-원’을 확대하지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에 민진당은 양안의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지만 소위 ‘92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양안관계에 대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대선 후보의 기본 인식으로서 양안의 평화공존 필요성을 정면으로 거부하

7) 마잉주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는 대만지도부와의 각종 회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5월 후 주석은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국공양당의 정치적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2009년 7월 27일 마잉주 총통의 국민당 주석 당선 축하 전문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국공협력과 양안의 16자 방침(正視現實, 建立互信, 擱置爭議, 共創雙贏)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 국무원 부총리 리커창(李克強)은 2012년 4월 1일 중국 하이난(海南) 보아오에서 대만의 ‘양안 공동시장 기금회’ 명예 단장 우둔이(吳敦義)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양안의 동포는 모두 중화민족이며 양안경제는 중화민족경제 속한다”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하나의 중국과 양안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人民日報』, 2012. 4. 2.

지는 않지만 대만의 자주 독립적 지위가 원칙적으로 부정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만 국민들은 ‘92 합의’의 문제점과 대만의 입장이 반영된 새로운 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진당의 주장이 모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인식을 가졌다. 결국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둘러싼 공방에서 국민당이 유리한 입지를 점했고 이는 결국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2년 대만 대선의 또 다른 쟁점은 2008년 이후 마잉주 정부가 추진한 양안 경협의 범위와 수준의 적정성 특히 ‘ECFA’의 성과 및 부작용에 관한 문제다. 국민당은 마잉주 정부의 ‘ECFA’ 체결로 대만의 2010년 경제성장률이 10.8%에 달했고 양안 교역량도 전년대비 37%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마잉주는 ‘ECFA’의 경제외적 효과로서 양안의 ‘신뢰구축’ 성과를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민진당은 양안 경협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ECFA’와 같은 과도한 경제적 밀착이 결국 대만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킴으로써 대만의 자주적 입지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중국과의 지나친 밀착과 경제종속화를 우려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과 ‘ECFA’는 대만의 정치, 경제적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각자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마잉주의 상생·공영 정책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ECFA에 대한 대만 여론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臺商)들을 중심으로 한 대만경제계는 마잉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 대다수 대만인들이 양안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경협의 축소보다는 통일과 독립의 중간 범위에서 상생·공영하기 원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정서는 시진핑이 대만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다.

Ⅲ.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양안관계 전망

제2장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는 대만의 정체성 회복과 자주독립의 지향, 소모적인 통독논의의 유보와 평화·공영 증진,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통합 수준의 제고 등의 단계를 거치며 변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중국과 대만의 최고 지도부 교체와 여론의 향배, 대만문제를 둘러싼 대외적 요인의 변화 추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양안관계 변화를 유발하는 이러한 요인은 시진핑 집권 이후의 양안관계 변화 과정에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상존할 것이다.

A. 18대 정치보고, 지도부 교체와 대만정책 변화

11월 15일 중국공산당 제18기 1중전회(中全會)에서 최종 확정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 과정은 보시라이(薄熙來) 사건 이후 심화된 당내 갈등으로 인해 진통을 겪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 인선이 점차 제도화되던 시점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마치 과거의 계파(派系)간 권력투쟁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점이 신생 시진핑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 단계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고 지도부가 갈등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인선 과정의 양금이 잔존할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을 동시에 승계한 시진핑을 중심으로 당 중앙의 단합된 면모를 과시할 것이다. 8)

시진핑 체제하에서 기존의 대만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마잉주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화해·상생·공영에

8) 2012년 11월 15일 18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시진핑, 리커창, 장더장(張德江), 위정성(俞正聲), 류윈산(劉雲山), 왕치산(王岐山), 장까오리(張高麗)의 내외신 기자 회견에서 시진핑 신임 총서기는 '중화민족의 단결과 부흥'의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신의 막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http://cpc.people.com.cn/18/n/2012/11/15/c350821-19590482.html>(검색일: 2012. 11.15)

기반한 대륙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탈대륙적 정서의 재확산을 억제해야 하는 중국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후진타오의 11월 8일 정치보고에서도 향후 시진핑 집권기의 대만정책이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 즉 총 12개 부분으로 구성된 정치보고의 10번째 항목에서 후주석은 ‘일국양제의 진일보 실천과 조국통일 추진’(豐富一國兩制實踐和推進祖國統一)이라는 제목하에 ① 중앙정부의 엄격한 기본법 준수, ②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의 의법시정(依法施政) 지지, ③ 평화통일, 일국양제 방침의 견지를 통한 평화적 통일 환경 조성, ④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 및 대만의 독립·분열 기도 강력 반대 등을 강조했다.⁹⁾ 이는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에 대한 기존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중앙정부가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각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의 의법시정을 강조했다라는 점인데 이는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국정전반의 의법시정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시진핑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그가 양안관계의 안정과 교류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양안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은 1985년 6월 샤먼시 부시장으로 푸젠성에 부임한 이후 2002년 10월 짜장성 대리 성장으로 전근하기까지 17년여를 푸젠성에서 근무했다. 시진핑이 부임했을 당시 샤먼을 비롯한 푸젠성 연안은 천혜의 입지 조건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외교류와 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었지만 1949년 이후 중국이 대만 해방을 위한 군사적 전초 기지로 삼으면서 매우 낙후, 폐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중국 정부가 샤먼을 4대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개혁개방 확대, 특히 대만과의 교류협력 강화 과정에서 대표적인 경제특구로 성장했다. 물론 시진핑은 푸젠성 근무시 중국의 최대 부패, 탈세 비리로 기록된 ‘위안화’(遠華) 사건 등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의 위기에 직면했으나 특유의 유연함과 처세술로 오히려 그의 전임자인 자칭린(賈慶林), 허귀창(賀國強) 등과 더욱

9) 胡錦濤,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社會主義,” 『人民日報』, 2012. 11. 9.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저력을 발휘했다.¹⁰⁾

2002년 짜장성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시진핑은 대만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성을 보였다. 예를 들어 시진핑이 2003년 짜장 성장에서 서기로 승진한 뒤에도 통상적으로 성장이 주관하는 대만관련 업무를 성 당위원회 서기처로 이관하여 직접 관장하는 등 양안관련 업무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¹¹⁾ 이처럼 시진핑은 1985년 허베이(河北)성 정딩(正定)현 부서기를 시작으로 2007년 상해시 당서기를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기까지 25년을 지방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양안교류의 전진기지인 푸젠성에서의 장기 근무를 통해 대만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양안의 긴장 완화 및 상생·공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물론 시진핑이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만문제 및 양안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이 향후 양안관계 변화에 반드시 긍정적 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대만으로서도 양안관계의 진면목을 꿰뚫고 있는 시진핑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기본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 구축과 양안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기존의 화해·협력, 상생·공영 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시진핑은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현지 경험을 살려 대만문제, 양안관계와 관련된 중앙의 조직, 인사 및 정책결정 과정을 재정비하고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과의 공식 접촉 창구인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會)의 기능 강화를 통해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와의 논의, 협상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형식적으로만 구분된 당중앙 ‘대만공작관공실’(中共中央臺灣工作辦公室)과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의 조직·업무 통합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관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안 경제·사회·문화교류 수준을 한 차원 제고하고 그 연장선에서 양안의 정

10) 소마 마사루(相馬勝), 『시진핑』(서울: 한국경제신문, 2011), 95-116쪽 참고.

11) Jane Perlez, “Close army Ties of China’s New Leader could Test the U.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3, 2012.

치적 접촉·협상 여지를 적극 모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과제이자 국가의 핵심 이익인 통일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전임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¹²⁾

B. 마잉주의 친대륙노선과 대만의 ‘통독’ 논의 향배

시진핑 집권 이후 마잉주 정부의 평화·안정 우선주의, 경협 확대를 통한 양안의 윈-윈 전략, 실용외교를 통한 국제적 지위 신장 등에 대한 대만 여론의 지속적인 지지 여부는 양안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양안의 평화·안정 우선주의에 대한 대만인들의 지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의 입장에서 정체성 회복과 자주 독립적 지위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양안관계의 평화·안정에 우선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민진당의 무리한 정책이 평화정착, 정체성 강화, 경제발전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을 궁지로 몰았다는 점에서 대만인들은 어떠한 정책도 양안의 평화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사실 하나의 중국원칙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규범으로 인식되어 있고 더욱이 중국이 ‘G2’로 부상한 상황에서 중국이 원치 않는 대만의 자주 독립적 지위는 불가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대만의 평화와 풍요는 보장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진핑 집권기에도 대만은 양안관계의 평화·안정 유지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³⁾

-
- 12) 중국공산당 18대 대변인 차이밍짜오(蔡名照)는 2012년 11월 7일 대만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안간에 정치적 의제가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쌍방의 노력을 통해 정치적 난제의 타개를 위한 조건과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 이는 중국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蔡名照, “兩岸間的政治議題遲早要面對”, http://www.gwytb.gov.cn/wyly/201211/t20121107_3356988.htm (검색일: 2012. 11. 8)
- 13) 이러한 가능성은 2012년 11월 8일 국민당 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18대 개최에 즈음한 축전 전문을 보낸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축전을 통해 국민당은 “국공 양

한편 마잉주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양안의 경협 확대와 성과에 대한 대만 여론의 지지 여부도 향후 양안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실 양안의 경협 확대는 절대 다수의 대만기업들이 대륙에 진출하고 있고 대륙 거주 대만인이 100만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만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제는 양안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대만 경제의 재도약보다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과 종속의 정도가 심화됨으로써 대만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 마잉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향후 경협 성과 여하에 따라 지지 여론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대만정부의 대륙정책에 관여하고 더욱이 중국이 이들을 통해 대만의 정치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매우 복잡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즉 중국 정부가 각종 특혜, 제재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중국의 대만기업들을 조종하고 이들을 매개로 대만의 정치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자칫 대만인들의 원초적 반대륙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대선에서 패한 민진당은 당시 중국정부가 마잉주를 지지하는 중국내 대만 기업인들의 귀국, 투표를 종용했으며 전세기 및 우대 항공권 제공, 대선 전후 중국인들의 대만 관광 금지 등으로 교토편의를 지원했다고 비난했다.¹⁴⁾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대만의 정치과정에 대한 개입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양안경협의 문제점에 대한

당이 현 단계의 교류협력 기반위에서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교류,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양안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답신에서 중국공산당 역시 "국공 양당의 노력을 통해 양안관계의 역사적 전환과 신국면을 열어 가는 동시에 '92 합의'와 대만독립 반대의 기초 하에 양안의 평화와 양안 동포의 복지 증진, 민족부흥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양안 주민의 일체성을 국민당은 '炎黃子孫'으로, 중국공산당은 양안 同胞·民族으로 표현했다는 점인데 이는 국공 양당이 양안의 민족적 일체성과 역사적 뿌리에 대한 공감을 표한 것이다. 『人民日報』, 2012. 11. 9.

- 14) 2012년 대선에서 대륙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들의 절대다수는 집단적, 명시적으로 마잉주를 지지하며 반민진당 여론을 조성했다. 특히 선거 직전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 총수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의 갈등과 경제적 퇴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잉주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만인들의 우려를 인식하여 대만의 농민, 어민 등 보다 많은 계층이 양안경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ECFA 체결 과정에서 노동력 이동 및 농수산물 수출입 자유화 등 대만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제외 조치를 취했는데 이 역시 대만내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의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잉주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 역시 양안관계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인의 하나다. 그동안 마잉주는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외교보다는 양안의 평화·공영과 현상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대외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대만의 정체성, 독립적 지위에 집착하는 민진당보다 국민당을 지지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대만인들 역시 과거 민진당 정부의 공세적인 외교가 오히려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양안관계의 안정 기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마잉주의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마잉주의 이러한 현상유지적 대외정책은 시진핑 집권기에도 지속될 것이지만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대다수 대만인들은 양안관계의 평화·공영에 대한 현실적 필요 때문에 마잉주를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만을 지방정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불만과 대만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갖고 있다. 즉 많은 대만인들이 대만의 정체성과 자주 독립적 지위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대만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대립 요인인 소위 ‘외성인’과 ‘본성인’, 세대, 개별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대만인들은 주권국과 지방정부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존재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타개하고자 한다. 다만 이를 ‘독립’과 ‘통일’이라는 극단적인 대립구조로 인식하기보다 장기적인 과정으로 유보하고 현실적인 양안의 평화·공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대내적 상황, 중국의 대만정책 및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 자주 독립 의지가 공세적으로 재 표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양안경협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빠르게 잠식할 경우 마잉주의 소극적, 수세적 외교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중국과 대만이 실용적 정책을 통해 양안의 상생·공영을 우선시하지만 그러한 정책적 탄력성이 통일과 독립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잠재된 욕구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의 불협화음과 그로 인한 관계발전의 기복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대만과의 정치·안보관계를 강화하려고 할 경우 양안 갈등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는 향후 마英九 정부가 미국에 경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견제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대만이 미국과의 정치·안보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모험이며 미국도 이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마英九 정부는 현 단계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만관계법’(TRA)과 공식적인 대표기구인 ‘미국대표부’(AIT), ‘대만대표부’(TECRO)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양안 교류협력과 미국과의 제한적 정치·안보협력을 최대한 병행하려고 할 것이다.

C. 미국의 대 중국, 대만정책의 조화와 충돌

규범적 하나의 중국과 현실적 두 개의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는 중국의 단순한 내정이 아니며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주로 미국 요인과 관련을 갖는다. 중국의 강대국화에도 불구하고 양안관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특히 집권 2기의 미국 오바마 정부가 ‘강한 미국’과 ‘아시아 복귀’(pivot to Asia)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경우 미국의 대 중국정책과 대만정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양안관계와 직결된다.

15) 최근 대만에서 새로운 레이더 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미국과의 정보 공유, 미국의 퇴역 전함 구입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 입법원 중심으로 공방이 이루지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무기의 구입 조건과 불이익 여부, 미국과의 정보공유에 따른 문제점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데 이는 미국과의 정치·안보관계 강화에 대한 대만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http://news.chinatimes.com/politics/50207343/132012110500722.html> (검색일: 2012. 11. 5).

물론 시진핑, 오바마가 중·미관계의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미의 새로운 리더십은 일단 양국관계를 대립국면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¹⁶⁾ 문제는 중국과 미국 공히 상대국에 대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존재하며 사안에 따라 강경한 입장이 힘을 받을 경우 양국간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¹⁷⁾ 특히 미국은 중국이 남사군도, 조어도 등의 해양 영토분규에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증강된 종합국력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¹⁸⁾ 따라서 이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대만문제는 그러한 전략적 대응의 핵심에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미국의 대 대만정책을 전망하면 첫째,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만관계를 내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 의회, 행정부가 ‘대만관계법’의 위상을 제고하고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표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또한 2012년 1월 대만 대선처럼 미국이 간접적으로 대만의 정치과정에 간여할 여지를 계속 모색할 것이다.

둘째, 미국이 대만과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과 무기 판매를 지속하는 동시에 미국의

- 16) 후진타오 주석은 11월 7일 오바마의 재선 축하 전문에서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중, 미는 물론 아태지역, 세계의 평화·안정에 유리하다는 점과 ‘새로운’(新型) 대국관계의 수립을 강조했다. 새로운 대국관계의 강조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미관계의 안정과 함께 미국의 대 중국 인식, 전략적 변화를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人民日報』, 2012. 11. 8.
- 17) 예를 들어 미국의 각 정당 및 정부 부처, 주요 정치 지도자, 단체 간에 시진핑 시대의 대 중 전략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중국의 경우에도 주요 지도자 및 학자, 정부 부처, 군부 등을 중심으로 대미 전략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중미관계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중국의 부상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헨리 키신저(권기대 역), 『중국 이야기』(On China) (서울: 민음사, 2012), 639-649 쪽 참고.
- 18)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재선 직후인 2012년 11월 17일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18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갖는다. 중국으로서는 11월 15일 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 정식 확정된 직후에 인접지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을 국방장관, 태평양군사령관 등과 방문한다는 점에서 불쾌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오바마의 행보를 ‘중국 포위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環球時報』, 2012.11.8.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따라 대만의 군사안보적 가치를 제고, 활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일본이 대만해협을 ‘주변사태’의 범위에 포함시켰듯이 미·일 안보협력의 확대 강화과정에서 대만 요인을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¹⁹⁾

셋째, 미국이 대만의 국제적 생존 공간 확대 시도를 간접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즉 유엔 가입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의 근본적인 변화와 직결된 사안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실상의 정치실체로서 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제적 지위와 활동을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만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만의 비정부, 준정부간 국제기구의 신규 가입 혹은 기존 지위의 유지²⁰⁾, 중남미 국가들과의 정식 외교관계 유지 등을 측면 지원하고자 할 것이다.²¹⁾

넷째, 오바마의 집권 2기 동안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일부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양안의 통일을 원치 않는 것처럼 민진당 정부가 추진했던 대만의 독립도 원치 않는다. 단지 대만의 민주체제

19) 이 경우는 중국의 ‘중합국력’이 증강되고 대만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 필요성이 제고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대만의 안보협력이 확대되는 악순환 과정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미국 내에는 시진핑이 후진타오에 비해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보다 공세적인 안보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이 경우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Jane Perlez, “Close army Ties of China’s New Leader could Test the U.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3, 2012.

20) 대만 정부는 유엔 가입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정부 간 국제기구(IGO)는 물론 비정부 간 국제기구(INGO)에서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읍서버 자격을 얻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대만문제의 국제화’, 즉 대만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Chien-Pin Li, “Taiwan’s Participation in Inter-Governmental,” *Asian Survey*. Vol. XLVI, No. 4(July/August 2006), pp. 599-603.

21) 대만과 중남미 국가들의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문홍호, 신중호, “중국의 중남미정책과 중·미관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중국문제연구소, 『中蘇研究』(2006년 가을) 참조.

와 시장경제 기반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방편이자 대 중국 견제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 통일과 독립의 중간에서 자국에 유리한 최적의 양안관계를 관리,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다.²²⁾ 실제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중국지도부를 배척하는 만큼이나 대만 정치권의 급진적 독립주의자들을 경계하며 마잉주는 미국의 그러한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은 양안관계의 평화적 현상유지를 목표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대만의 비현실적 독립 시도를 모두 거부하는 이중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관계발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사이에 두고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듯이 미국과 대만의 관계 역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 내에는 여전히 대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인정하고 대만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이 상존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지만 중국과의 극한대립을 감수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방조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²³⁾

IV. 결 론

중국공산당 18대 개최를 계기로 중국은 지난 10년의 종합국력 증강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22) 물론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즉 미국정부가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의거하여 ‘하나의 중국’과 ‘대만 방위공약’ 사이에서 줄타기정책(tightrope policy)을 하기보다는 대만문제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재조정(restructuring)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Ted Galen Carpenter, *America's Coming War with China: A Collision Course over Taiw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pp. 143-145 참조.

23) 래서터(Martin M. Lasater)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주요 강대국으로 대우하는 동시에 대만을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전통적 우방으로 지지하기를 원하는 데 이러한 이중적 접근(dual-track approach)은 미국의 실용주의, 이상주의 가치관이 혼재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Martin L. Lasater, “American Values in U.S. China Policy,” *The Taiwan Conundrum in U.S. China Policy*.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pp. 1-20 참조.

표명하고 있다.²⁴⁾ 동시에 중국은 자신들이 명실 공히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2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동시에 승계함으로써 중국의 당권과 군권을 장악한 시진핑의 취임 일성도 국가의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단결과 사명의식이다. 대만문제는 바로 중국이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의 핵심이다.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 등장은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현 단계의 양안관계는 과거 대만을 해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륙을 수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던 극한 대립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정치적 대립이 상존하지만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원-원의 경계가 크게 확장된 양안관계에서는 지도부의 정책적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비록 중국과 대만이 의도하는 최상의 양안관계가 판이하지만 어느 일방도 통일과 독립을 향한 구체적 행동을 선불리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시진핑은 대만해방을 위한 군사적 전초기지에서 양안교류의 중심으로 변모한 푸젠지역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과 정치력을 검증받은 인물이다. 특히 대만과 동일한 언어, 문화권인 푸젠 지역에서 17년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대만 및 양안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의 등장이 양안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하면 우선 시진핑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과거와 차별화된 새로운 관계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각 분야별 협상을 통한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함께 ‘정치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발전 시도는 시진핑 집권 초기 권력기반, 정통성 강화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칫 대만의 반발을 야기하고 심지어 양안관계를 퇴보시

24) 예를 들어 중국은 10년 전 국제사회에는 중국경제가 쇠퇴일로에 있고 중국의 현행 정치·경제체제가 5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는 ‘중국붕괴론’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서방의 역사학자들이 500년의 서방 통치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토로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모델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표출한다. 任仲平, “轉變, 現代化歷程的關鍵性突破 - 從十六大到十八大 (上, 下)”, 『人民日報』, 2012. 11. 6, 7 참고.

킬 수도 있다. 특히 양안의 화해협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존성 심화,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 상실을 우려하는 대만의 여론은 중국이 제기하는 양안의 정치적 논의와 협상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마잉주의 친대륙적 정책에 타격을 가하고 민진당의 득세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만문제와 관련된 중미간의 새로운 논의와 합의 역시 시진핑이 주력할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국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시진핑 역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더욱이 시진핑에게 있어 미국 요인은 그의 지도력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대만문제와 관련된 미국 요인 중에서도 중미관계와 미국의 대만정책은 결정적 요인이다. 신생 시진핑 지도부와 제2기 오바마 정부는 모두가 ‘강한 국가’를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부분 국내 여론을 의식한 구호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냉전 이후 누렸던 유일 패권의 지속을 원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 국력 변화에 부응하는 ‘신형’의 중미관계를 요구하는 중국의 마찰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특히 대만문제는 향후 중미 갈등을 촉발, 심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다.

결국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양안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양안관계를 현장에서 경험한 시진핑의 집권이 양안의 상생·공영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지 혹은 경험을 과신한 무리수로 대만해협의 긴장을 초래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아시아 복귀를 구체화하며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재검토하는 미국 변수도 시진핑 지도부에겐 버거운 짐이다. 다만 시진핑이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저력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력, 안정 우선주의, 특유의 친화력과 여유 등에 있었다는 점에서 양안의 ‘통독’ 문제에 있어서도 전임자들의 정책기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집권 초기 조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결연함을 수시로 표명하겠지만 이는 중국의 점증하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정서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 반드시 구체적 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참 고 문 헌

- 소마 마사루(相馬勝), 『시진핑』(서울: 한국경제신문, 2011).
- 헨리 키신저(권기대 역), 『중국 이야기』 (On China) (서울: 민음사, 2012).
- 문홍호, 중국과 대만의 협상제도와 운영 사례 연구, 『中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종합연구센터, 제43권(2010. 3).
- 문홍호, 신중호, “중국의 중남미정책과 중·미관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중국문제연구소, 『中蘇研究』 (2006년 가을).
- Carpenter, Ted Galen. *America's Coming War with China: A Collision Course over Taiw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 Lasater, Martin L. “American Values in U.S. China Policy,” *The Taiwan Conundrum in U.S. China Policy*.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 Li, Chien-Pin. “Taiwan’s Participation in Inter-Governmental,” *Asian Survey*. Vol. XLVI, No. 4(July/August 2006).
- Perlez, Jane. “Close army Ties of China’s New Leader could Test the U.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3, 2012.
- Rigger, Shelley. *From Opposition to Power: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2001).
- 任仲平, “轉變 現代化歷程的關鍵性突破 - 從十六大到十八大 (上, 下), 『人民日報』, 2012. 11. 6, 7.
- 胡錦濤,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社會主義,” 『人民日報』, 2012. 11. 9.
- 蔡名照, “兩岸間的政治議題遲早要面對,” http://www.gwytb.gov.cn/wyly/201211/t20121107_3356988.htm (검색일: 2012. 11. 8).
- 『人民日報』, 2012. 11. 9.
- 『環球時報』, 2012.11.8.

<http://cpc.people.com.cn/18/n/2012/1115/c350821-19590482.htm>(검색일: 2012.11.15)

<http://news.chinatimes.com/politics/50207343/132012110500722.html> (검색일: 2012. 11. 5).

[논문투고일: 2012. 10. 10]

[심사의뢰일: 2012. 10. 18]

[게재확정일: 2012. 11. 08]